

소상공인 2면

“더는 못 버틴다”... 3000명 국회 앞서 생존권 사수 외쳤다

소공연·전상연 등 4개 단체 참여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결의대회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중단 요구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구분적용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요구 宋 “양극화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

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못버틴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지역업자총연합회, 한국의식업중앙회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낮은 유산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소공연

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6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입대료와 대출

이자 숨통을 죄어오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늘어나는 빚더미와 절망뿐”이라며 “회업을 무기로 전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

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송 회장은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도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저지 의사를 전했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찬성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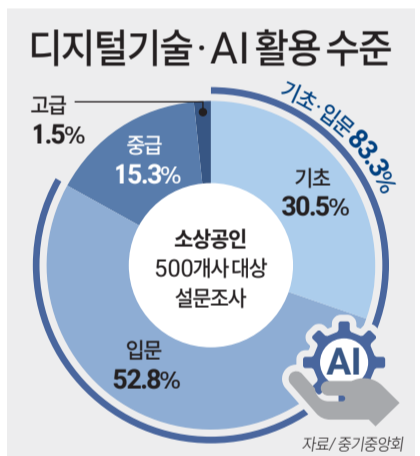


10곳 중 8곳 디지털·AI 활용... 역량은 아직 ‘초기 단계’

중기중앙회, 500곳 DX·AX 조사 83.3%는 입문·기초 단계 머물러 경영지원·고객응대 분야 활용 많아

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디지털 기술·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급’ 이상 단계는 10곳 중 2곳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기술·AI 활용을 위해 운영 비용 지원, 초기 비용 지원 등을 가장 원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DX·AX 현황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9



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AI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80%가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미활용’은 19.6%, ‘활용 중단’은 0.4%였다. 이는 문서 작성, 키오스크, 배달앱 등 일상적인 디지털 기술까지 포함한 수치다. ‘디지털 기술·AI 활용 수준’은 ‘입문 단계’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초 단계’(30.5%), ‘중급 단계’(15.3%), ‘고급 단계’(1.5%) 순으로 많았다. 응답 소상공인 중 83.3%가 활용 초기 단계여서 디지털 활용 역량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복수 응답)는 ▲경영지원(54.5%) ▲고객응대(31.8%) ▲판매·유통(22.3%) ▲마케팅·

홍보(21.3%) 등으로 파악됐다.

또 분야별 주요 활용 기술(//)을 살펴보면 경영지원은 ‘디지털 POS 시스템’(68.3%), 고객 응대는 ‘AI 통화비서 및 챗봇’(66.9%)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판매·유통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51.1%), 마케팅·홍보는 ‘SNS 채널 운영’(52.9%)이 대표적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69.8%는 ‘시간 단축 및 효율화’를, 25.5%는 ‘홍보 효과로 인한 매출 증대’를 경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감소’(11.0%), ‘고객 만족도 향상’(8.5%) 등의

효과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디지털 기술·AI 지원 정책은 ▲운영 비용 지원(59%) ▲초기 비용 지원(35.8%) ▲맞춤형 교육(16.6%) ▲컨설팅 지원(14%) 순으로 나타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비율은 높지만 아직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장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모두의 창업’ 1기 선발... AI·로컬 아이템 눈길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기술교육 지원

중기부, 창업인재 1기 발표 39세 이하 청년 68.4% 차지 일반·기술 4000명, 로컬 1000명 창업자금 2000만원·멘토링 제공

‘13세에서 78세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인재 1기 5000명이 최종 확정됐다. 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선발 결과에 따르면 5000명 중 39세 이하 청년이 6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기술 트랙 최연소 선정자인 김태인(13) 학생은 학교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다.

78세의 최연장 선정자는 ‘음식물 쓰레기 탄화체를 활용한 친환경 나프타 제조 기술’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외국인 선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시험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원고지 연습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선발됐다.

로컬 트랙의 17세 최연소 선정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72세 최연장 선정자는 ‘경북 못난이사과 업사이클(재활용)에 기반한 물 없이 녹는 K-사과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을 각각 제안했다. 외국인 선정자는 일본인 창업자의 시기로 일본인 관광객 대상 부산 여행 정보 플랫폼 개발’로 첫 관문을 넘었다.

전체 선정자 중 지역 인원은 74%로 집계됐다. 트랙별로는 일반·기술 트랙 70%, 로컬 트랙 90%의 지역 도전자가 뽑혔다.

일반·기술 트랙은 IT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라이프스타일(17.8%), 바이오·의료(10.1%), 교육(6.8%)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48.2%), F&B(37.3%), 뷰티(9.3%) 순이었다. 일반·기술 트랙 선정 아이템 중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템은 29.3%로, 전 산업 분야의 AI 확산을 실감케 했다.

선정된 5000명 전원에게는 창업활동을 위한 창업활동자금 2000만원과 창업 초기 멘토링 및 AI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1기

에 선정되지 못한 5만8000여명의 도전자에게는 아이디어 심사를 담당한 멘토들의 평가 의견과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말 포함 총 40회 운영된다.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도전자들이 원하는 멘토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3회 진행된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참가자와 기존 신청서 대비 아이디어를 보완한 도전자에게는 내달 초 개시될 2기 선정평가 시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에 선정된 5000명의 아이디어가 날개를 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5만8000명의 도전자들에게도 체계적인 재도전 지원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창업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업종전문기술교육 모집 120개 기관 연계 4000명 교육 온라인 과정 신설·국비 9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업종전문 기술교육’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24누리집’에서 접수받는 업종전문기술교육은 급변하는 내수 시장과 트렌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선택형 교육 배우처’ 프로그램이다.

이·미용, 외식업, 공예·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120개 민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올해 총 4000명(건)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고품질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업종별 기초 실습 중심의 ‘기초 과정’ ▲업종 특화 기술 및 신기술을 접목하는 ‘심화 과정’ ▲기술 고도화와 인증·특허 취득을 돕는 ‘특화 과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교육과정별로 20~60시간 내외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는 국비(90%)와 자부담(10%)을 포함하여 회당 20만~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교육은 자부담 면제다.

특히 올해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는 교육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등 혜택의 폭도 넓혔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거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비 환급 신청 마감 이전 휴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비 환급이 제한된다.

김승호 기자